

12.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: 2022년 9월 30일
- 발 의 자 : 황순자 의원, 김재용 의원, 박소영 의원, 박종필 의원,
손한국 의원, 이성오 의원, 이재숙 의원, 조경구 의원,
허시영 의원
-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4일
- 상정일자 : 제29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제1차 문화복지위원회(2022년 10월 17일) 원안 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황순자 의원)

□ 제안이유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책 추진대상을 경력단절 여성에서 취업 여성으로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제명을 “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”로 변경
-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(안 제3조)
-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(안 제4조)
-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5조)
-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6조)
- 관련 사업 위탁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7조~제8조)

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이규홍)

- 제명을 ‘「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」’에서 ‘「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」’로 변경하였음.
-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는데, ‘경력단절 예방’에 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였음.
- 안 제3조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4조는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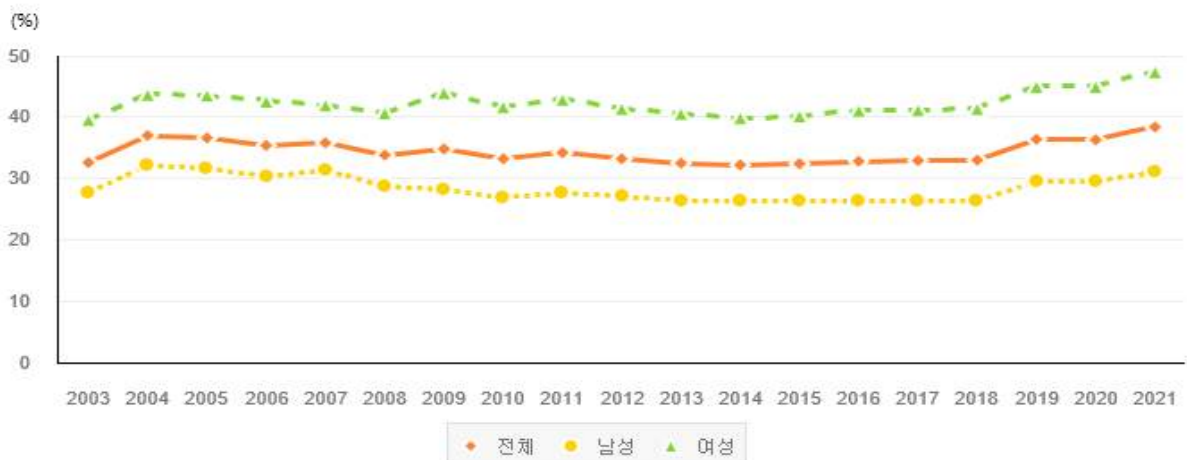
- **안 제5조**는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- **안 제6조**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내용을 규정하였음.
- **안 제7조**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
- **안 제8조**는 사무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□ 검토결과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사업추진 대상을 경력단절 여성이나 취업희망 여성에서 취업 여성까지 포함하여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강화하고 시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- 대구시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지원을 위해 44억원을 투입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,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, 직업교육 훈련,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.
- 그러나 지금까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은 주로 혼인·임신·출산·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등에 한정하여 추진되어 왔으며,

- 여성들의 보다 근본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도 경제활동 촉진 정책 대상에 포함하여 당초에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예방 기능이 중요하다 할 것임.
- 대구시 경력단절여성 인구는 2021년 기준 76,800명으로 서울과 부산 다음으로 많으며, 경력단절여성 인구 비율은 19.8%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여성 취업 지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음.
- 또한 전국의 성별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,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보다 매년 10%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, 남성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0% 정도 수준에 그쳐 OECD 주요회원국 중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고용구조 및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에서 여성의 노동권이 여전히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여성의 노동조건 및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회 구조적인 변화의 노력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에 본 조례안 개정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.

성별 비정규직근로자비율



출처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

*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」 각 연도 8월



※ OECD 주요회원국 남녀임금격차

[단위 : %]

연 도	OECD 평균	한국	일본	미국	캐나다	영국	체코	뉴질랜드	노르웨이
2021	12.0	31.1	22.1	16.9	16.7	14.3	11.5	6.7	4.6

※ 출처 : OECD Data

※ OECD의 남녀임금격차는 중위기준 남성임금과 여성임금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으로, 우리나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는 차이가 있음.

-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근거가 마련된 만큼, 개인 생애주기에 따른 경력단절 사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관행, 고용의 불안정성 등 여성의 노동조건 및 환경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	의	답	변
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기 바라며,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취업지원 대상을 경력단절여성 뿐만 아니라 취업여성 및 취업희망여성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.		그렇게 하겠음.	

5. 토론요지

- 없음.

6. 수정안 요지

- 없음.

7. 심사결과

- 원안 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.